

‘이기적 세대’라는 비난 그만 듣고 싶다면

에스프레소

조귀동

경제 칼럼니스트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이 걷고, 누구에게나 많이 주겠다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볼 때마다 뉴질랜드 복지 제도를 다룬 ‘이기적 세대(Selfish Generation?)’라는 책이 떠오른다. 복지와 조세 영역에서 특정 세대의 독주가 어떻게 비롯됐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저자인 데이비드 톰슨은 뉴질랜드 사회복지가 1930년대생의 이해관계에 맞춰 시작됐고,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30년대생은 결혼 적령기엔 가족수당, 살집이 필요할 땐 주택수당, 은퇴할 땐 연금제도가 도입됐고 강화됐다. 나이가 들어 필요 없어진 복지 제도는 가차 없이 축소했다. 그들이 고소득자 대열에 합류한 1980년대에는 누진적 소득세 제도를 대폭 손바퀴 세금 부담도 낮췄다.

이들이 복지와 조세 제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건 먼저 다수였기 때문이다. 또 그들의 사회 진출 시기와 경제성장 시기가 맞물리면서, 삶의 질 개선의 제의 주도권도 잡을 수 있었다. 당연히 하계도 뒷감당은 젊은 세대의 몫이었다. 톰슨에 따르면 1930년생은 평생 번 소득의 20%를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로 내고 37%만큼의 혜택을 받았다. 1955년생의 경우 낼 돈은 소득의 29%로 폭증

했고, 혜택은 27%로 급감했다.

한국에서 ‘x86’이라 불리는 60년대생 대졸자들은 뉴질랜드 30년대생과 비슷한 역할을 해왔다. 먼저 2010년을 전후해 활성화된 복지 의제의 핵심 지지 집단이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고소득자였지만 자산 축적 규모는 작았고, IMF 사태를 겪으며 사회화 리스크에 취약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자녀 양육에 뒤따르는 부담을 줄여주고, 국공립 보육 시설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 집중적으로 도입됐다. 60년대생이 장노년이 되자 문재인 케어 등 건강보험이 강화됐다. 반면 이 세대가 가장 손해를 보게 될 국민

뉴질랜드 30년대생 님은 86세대多數를 무기로 복지·세금 큰 혜택 불만 가득 청년들 友軍 만들려면 미래 세대에 관한 주고 양보해야

연금 개혁은 은퇴를 몇 년 앞둔 시기까지 계속 미뤄지다, 50대 대기업 부장이나 조금 임원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으로 낙착됐다. 청년들이 연금 개혁안에 반발하는 건 당장의 세대 간 부담의 불균형 때문만이 아니다. 몇 년 뒤 다시는 의될 ‘개혁안’에서 확정적으로 부담이 될 게 뻔해서다.

조세정책도 비슷한 양상이다.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이 공세적으로 감세론을 꺼내는 건 대통령 선거 승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2010년 30~40대-고소득-자산이었던 주력 지지층이 이제는 중장년-고소득-고자산 집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금융 소

득, 부동산 보유, 상속 증여에 뒤따르는 세금을 낮춰주는 데 민주당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게 된 것이다.

60년대생의 이해관계가 바뀌면서 세대 간 동맹 관계도 변했다. 반값 등록금 같은 의제로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던 방안은 불가능해졌다. 상위 10% 안에는 너그러워 드는 장노년 상위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수혜 대상을 고려자와 자산가로 넓혀겠다는 행보가 이어지는 이유다.

문제는 보수 정당이다. 입으로는 ‘86 청산론’을 외치지만, 정책 의제는 별 차가 없다. 의제만 보면 고령자산가들만 신경 쓰는 게 그들의 사회경제 정책 실상이다. 오히려 명문대 로고가 새겨진 야구 점퍼를 입은 젊은이들을 화동(花童)으로 쓴다는 냉소자 나올까. 그 냉소의 결과는 여론조사 수치로도 확인된다.

대선 두 달 전인 2022년 3월과 지난주인 4월 2주 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60대는 탈(脫)보수 현상(국민의힘 지지율 52%→36%)이 뚜렷하고, 20~30대는 보수·진보를 모두 꺼리는 무당층 유권자(20대 32%→39%, 30대 22%→28%)가 늘었다.

불만에 찬 청년층을 우군으로 삼고 싶다면 어떻게 이 세대 간 불균형을 끝낼지 명확히 밝혀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노후 문제는 세대 간 재분배가 아니라 세대 내 재분배로 해결해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아예 젊은 세대에 경제와 복지 문제의 방향타를 넘기는 것도 방법이다. 진심으로 ‘이기적 세대’를 이기고 싶다면 기득권부터 내려놓을 때라고 생각한다.



존 싱어 사전트, X 부인의 초상화, 1883~84년, 캔버스에 유채, 208.6×109.9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고상하기보다는 오히려 천박했던 이 초상화에 대해 대중은 일제히 조롱과 비난을 퍼부었다. 손가락질을 건디지 못한 고트로는 사교계를 떠났고, 사전트 또한 런던으로 이주해야 했다.

사전트는 고트리가 사랑한 이듬해인 1916년에야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이 그림 판매 의사를 전했다. 사전트의 결작을 눈앞에 둔 박물관에서는 일주일도 안 돼 구입을 결정했다. 그때까지 삼십 년이 넘도록 사전트는 이 그림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제 목 목한 누구나 다 아는 그림 대신 ‘X 부인’이라고 고집했다. 본의는 아니었지만, 큰 상처를 입힌 이에 대한 예의였다.

포스트백 교수·서양미술사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77]

X 부인의 초상화

존 싱어 사전트(John Singer Sargent·1856~1925)는 미국 출신 화가로, 19세기 말 유럽 상류층의 세련된 이미지를 화려한 붓질과 세밀한 관찰력으로 포착해 큰 성공을 거뒀다. 그가 남긴 초상화 수백 점 가운데 사전트 스스로가 ‘최고 작품’이라고 단언한 건 바로 이 ‘X 부인의 초상화’다.

초상화의 주인공은 버지니 고트로, 프랑스 은행가의 미국인 아내였던 그녀는 특이한 미모와 대담한 행각으로 파리 사교계를 사로잡았다. 초상화만 모델이 화가에게 의뢰하는 법이지만, 이 초상화만큼은 화가가 고트로 부부를 설득한 끝에 성사됐다. 같은 미국인으로서 파리에서 성공을 꿈꾸던 젊은 화가 사전트는 최고 유명인의 초상화를 그려내면 상류층 고객이 줄을 서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객의 시선은 그녀의 뾰족한 콧날, 날렵한 턱선, 팽팽한 목선을 타고 내려가 흰치 드려난 풍만한 상체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심지어 원래 그림에서는 드레스의 한쪽 어깨끈이 흘러내려 있었다. 아름다움을 넘어 도발적이고,

社 説

한미 관세 협상 개시 ‘문제 해결’ 국가 능력 시험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경제 안보 전략 TF 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5개 상호 관세 대상국 중 한국·일본·인도와 먼저 협상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우리가 협상의 최전선에 서게 돼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할 수도 없다. 국가적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트럼프는 1기 정부 때도 한국을 불공정 흑자국으로 지목하고,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며 우리를 거칠게 몰아붙였다. 당시 한국 협상팀은 팽업트릭 수출 관세에서 양보하는 등의 협상 카드로 FTA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 2기가 한국에 25% 상호 관세율을 부과한 것은 한미 FTA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난번 수준의 양보 카드로 한미 FTA 협정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듯하다.

그렇다고 해도 협상팀은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자유무역이 상호 이익이 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10년간 한국은 연평균 100억달러의 대미 추가 무역 흑자를 얻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도 연평균 77억달러 늘어나,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양국이 모두 이익을 본 것이다.

군 복무 단축 이어 ‘주 4일제’ 포퓰리즘 경쟁 시작

국민의힘이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월·목요일엔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9시간으로 1시간씩 늘리는 대신 금요일엔 4시간만 근무하는 주 4.5일제가 실질적 위라벨 대안”이라고 했다.

‘주 4.5일제’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2월 국회 대표 연설에서 제안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AI와 첨단 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비용 상승으로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당시 국민의힘은 “경제 악영향과 부작용이 큰 인기 영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대선이 다가오자 표를 의식해 급선환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총근무시간을 줄이지 않고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이 전 대표와는 다르다고 했다. 하지만 집중 근무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 풍토에서 이런 제도의 성공한 도입은 안

작년까지 한국이 미국에 공장을 짓느라 투자한 돈이 1300억달러에 이르고, 미국 진출 한국 기업 수가 1만5000곳이 넘는다. 한국의 대미 흑자 대부분은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이 현지 생산에서 필요한 중간재의 60%를 한국에서 조달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사실은 미국 측도 인정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포인트다. 나아가 장차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한국 제조업 역량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면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2.0% 중 1.9%는 수출이 기여한 몫이다. 미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한다.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대미 수출이 줄고 성장률도 하락할 것이다. 대미 통상 협상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에 수출의 미래가 걸려 있다.

이번에 타결되는 양국 간 통상 협상은 두 달 뒤 대선에서 어떤 세력이 집권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경제 운용의 상수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두 달 뒤 대선 결과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민 실생활 측면에선 대선보다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이 문제만큼 정쟁의 시선을 거두고 거국적인 협상 전략을 마련해 임하고, 협상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그래도 떨어지는 노동생산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정치권이 이 경쟁을 벌이는 것은 전적으로 기업이나 자영업자 표보다 근로자 표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병사 복무 기간을 줄이는 경쟁을 벌인 것도 마찬가지다. 대선 때마다 군 복무 기간이 줄어들어 이제 18개월까지 줄었다.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은 턱없이 부족한데 기초적 군 전술·전기도 익히기 전에 전역하는 상황이 됐다. 지상군 병력은 곧 북한 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 책임은 누가 지냐. ‘병장 월급 200만원’ 대선 공약을 강행하는 바람에 국방 예산에 왜곡이 발생하고 학군장교와 사관학교, 부사관 지원율이 급락했다.

‘주 4일제’는 이번 대선 포퓰리즘 경쟁의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앞으로 수십조 원이 드는 선심성 사업과 국민 1인당 얼마를 뿌리겠다는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국가 부채가 1200조원에 이르고 세수 부족으로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데 오히려 표를 얻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서울대·지방대 공동 학위제 성사를 소망한다

서울대 교수회가 지방 거점 국립대와 공동 학위제 운영을 포함한 교육 개혁안을 발표했다. 중·고교를 6년제로 통합하는 방안,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능을 1년에 3~4차례 실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동 학위제 활성화는 지방 거점 국립대가 서울대와 지도 교수, 전공 수업 등을 공유하며 학생들이 ‘공동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해 당사자 중 한쪽인 서울대 교수들이 먼저 공동 학위제를 제안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지난해 경성국립대는 서울대와 우주항공 분야에서 공동 학위제를 추진했지만 성사시키지 못했다. 서울대 학생들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한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공정성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병적인 대학 서열화, 이로 인한 사교육 지옥, 수도권 집중 현상, 지역 양극화, 급속한 지방 몰락, 서울 집값 폭등,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나타난 저출생 현상 등에 비하면 작은 문제다. 공동 학위제는 서울대 학생들을 설득하고 제도를 보완해 성사시켜야 할 과제다.

우선 경상대의 우주항공, 경북대의 전자공학이나 IT, 부산대의 바이오 분야와 같이 지방 국립대가 강점을 가진 분야부터 공동 지도 교수제, 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등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해 공동 학위제로 나아가면 부작용도 줄어든다. 다른 대학에 비해 압도적인 국민 세금 지원을 받는 서울대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교육·연구 인프라를 다른 대학 학생들에게도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은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와 공동 학위제를 활성화하면 학생 수 감소 등 위기를 겪는 지방대에 수업의 질 향상은 물론 학생 취업 등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다. 지금 우리 교육제도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악화돼 있다. 대학의 세계 경쟁력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가운데 도토리 키 재기 같은 국내 대학 서열화는 굳건하기만 하다. 이런 문제를 개혁하는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서울대와 공동 학위제는 꼭 결실을 보았으면 한다. 서울대 구성원들의 결단을 기대한다.

절대로 잊을 수 없다. 표적이다

정치화 하고, 카르텔 되고, 원님재판 맛들인 법가(法家) 19명

뉴데일리
newdaily.co.kr



▲ 맨 위 권순일, 박영수, 유창훈, 김동현, 오동운. 그 아래 박광서, 이순형, 차은경, 정재오, 최은정-이예슬(사진 특정 안되어 ??). 세번째 김형두, 조한창, 정장미, 이마선. 맨 아래 정형식, 김복형, 문형배, 정계선. © 뉴데일리 / 법률신문(박광서만)

오늘의 조기 대선 국면에 임하는 자유국민의 마음은 비통(悲痛)이다. 이렇게 된 것을 체념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Yoon again)이다.

그러면서도 《현실은 현실로서 강제되고 있음》은 어쩔 수 없다. 이제 삶의 부조리(不修理). 모순과 갈등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가버리는 인간의 실존.

그렇다고 우리는 강제된 현실에 품착없이 당하고만 살 것인가? 그런 아니다. 아니어야 한다. 우리는 자유 의지에 따라 부조리를 거부하고 맞붙어 싸워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도 우리는 무엇인가에 온 마음으로 부딪혀야만 한다. 무엇에?

개판 불려온 법가(法家)들

우리를 격분시킨 그것. 지난 탄핵 과정에서 우리 마음을 특별히 할퀴었던 그것! 무엇이 《자유 국민 / 2030 / 호남 일부 국민》을 그토록 격앙시키고 각성시키고 결기시켰던가?

맞다. 그거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잊을 수 없다.

정치화하고, 카르텔이 되고, 《원님 재판》에 맛들인 저 법가(法家)들. 그거다! 그들이야말로 《오늘의 개판》을 불려온 우리의 통탄(痛嘆)의 원인이자, 표적이다. 이들은 누군가?

이들 18명 기억하자

① 권순일 전 대법관. 그는 로비스트의 교섭을 받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때 무죄 선고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② 박영수 변호사. 박근혜 탄핵 때 특검단장이었던 그는 언론에서 소위 《50억 클럽》의 일원이라 불리며 《대장동》에 연루돼 있다.

③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그는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길이 남을 말을 남겼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지럽다, 너무 돌려서.

④ 오동운 공수 처장. 그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작전을 최선두에서 지휘했다. 형사기동대 2천여 명이 한남동 관저를 기습했던 그날의 변괴!

⑤ 이순형 서부지법 부장판사. 그는 공수처의 이른바 《영장쇼범》에 호응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순순히 발부해 주었다.

⑥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 그도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증거인멸의 우려》란 단 몇 마디 단어로 발부해 주었다.

⑦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그는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엔 이석기 항소심에서 그의 1심 형량을 깎아 주었다. 항소심에선 형이 곧잘 줄기는 하지만, 그랬다 이거다.

⑧~⑩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들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유죄판결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희대 상고심》에선 어떤 판결을 내릴까?

⑪~⑬ 문형배-정계선-이마선-김복형-정정미-정형식-김형두-조한창. 우리 가슴에 평생 가시지 않을 피명 자국을 찍어놓은 현재 판사들!

⑭ 박광서 수원고법 형사재판부 부장판사. 그는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지 4일 만에 《대장동 김만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년 6월 형을 선고한 1심이 사실오인-법리 오해를 했다고, 그는 현재 선고가 나온 당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기뻐하라, 그분이 드디어 사라졌다.” 그렇게 기쁜가?

물러터지면, 또 당한다

자유인들은 좌익과 달리 물러터지지만 했다. 더도 덜도 아니고 그들 만큼만 강해지자. 우리도 우리 마음의 상처를, 그들이 자신들의 상처를 기억하는 만큼 기억하자.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네티온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컬럼으로 2025년 4월 12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146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